

# 조국·윤미향에 대한 대법원의 책임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3 정당까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고 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 2심은 1년이 걸렸다. 1심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가 돌연 휴직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지 않았다면,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법원이 정치적 결과까지 예상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그 상황을 자기 정치에 백분 활용해 결국 '성공'했다. 재판 결과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총선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형(刑)이 확정되면 "푸시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면서 건강 관리 해서 나오겠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안 했을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수감되도 '반성' 대신 '건강 관리' 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법원 판결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급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 대표의 형량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선고를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 조 대표와 같은 '불구속 실형'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대체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인 사건은 특히 더 그렇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을

**불구속 실형, 당선무효형 사건 대법원 선고 지연되는 경우 많아**  
한명숙 2년, 최강욱 1년 3개월 걸려 선고 빨리 해야 제때 정의 실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그 형량을 그대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거의 2년이 지나서 나왔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8개월, 3심 8개월 등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대부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런데 불구속 실형 사건엔 그런 제한이 없어 선고가 늦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불구속 실형의 취지가 그 상태로 몇 년씩 놔두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때 정의를 실현하려면 적어도 구속 사건에 준해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

해야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확정 판결이 나와야 언제 실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건이 무죄라고 해도 다를 게 없다.

실형은 아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경우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형인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임기를 다 채운 판이다.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조 대표 사건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대법관 3명이 퇴임하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후임 대법관 임명엔 국회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원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 조국·윤미향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김준의 맛과 삶 [188]

## 울릉도 나리 '맛의방주' 밥상

새벽까지 깃대봉에 오를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일어나자마자 밖을 보니 미세 먼지로 코끼리바위가 흐릿하다. 동해바다 울릉도마저 미세 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산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나리분지로 향했다. 지난해 울릉도를 찾았을 때 눈인 사람 나누고 돌아왔던 '맛의방주(Ark of Taste)' 밥상을 받고 싶었다.

나리분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화구가 합몰되어 만들어진 화구원이다.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만, 용암이 부서진 흙·모래·돌맹이로 이루어진 땅이라 물을 담지 못한다. 그래서 벼농사는 어렵고, 섬말나리·취·고비·명이·부지갱이·물영경귀·옥수수·홍감자 등 밭농사를 한다. 봄철 곡식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섬말나리 뿌리나 명이 줄기를 곡물 가루와 버무려

밥떡을 만들어 끼니를 해결했다.

천부에서 나리분지로 가는 길에 밭에서 명이를 뜯는 주민을 만났다. 명이 줄기와 옥수수 가루로 밥떡을 만들어 식량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앞으로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어 먹지만 당시에는 줄기를 이용했다. 남쪽 사동마을에 거주하는데 산을 넘어 북쪽 산자락까지 넘어와서 농사를 짓는다. 명이나물을 찾는 사람이 많은 탓이다. 명이뿐만 아니라 나리분지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울릉도에서도 인기가 높다. 이렇게 울릉도 산나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맛의방주'다.

'맛의방주'는 잊혀 가는 음식 맛을 재발견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자와 품목을 찾아내 기록하는 슬로푸드 프로젝트다. 지난해 말까지 국제슬로푸드한국 협회는 110여 개 품목의 '맛의방주'를 발



굴했다. 울릉도에서 가장 먼저 맛의방주에 등재된 품목은 섬말나리와 찰소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11월 슬로푸드 울릉지부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손곰지, 울릉홍감자, 옥수수엿장주, 긴잎돌김, 물영경귀, 두메부추, 삼나물, 참고비, 명이나물 등도 추가되었다.

나리분지에 이러한 '맛의방주'로 등재된 산나물을 이용해 밥상을 내놓는 곳이 있다. 밥상에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맛의방주 품목을 올린다. 나홀로 주문이지만 두메부추장아찌, 물영경귀된장국, 명이나물, 삼나물이 올라왔다. 여기 예 옥수수로 만든 술을 곁들였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세자”와 점수 빈칸, 말문이 막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등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다른 사무총장 등 22명의 비리 의혹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4급 이상이 350명 정도인 조직인데 전현직 49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를 받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감사원이 밝힌 채용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선관위는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더니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 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 선관위에서 총장은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고 한다. 다른 전 총장의 딸을 선출할 때는 면접 위원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 전 사무차장의 딸도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의 지원만 받는 인사를 통해 원하는 자리를 얻었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리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선관위 6급이 2019년 군수를 찾아가 선관위 4급 자녀 관련 인사 청탁을 했다. 군수가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려는데, 선관위가 계속 압박하니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도 선관위 앞에 선 신경을 쓴다. 선출직에게 선관위는 권력 기관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자체 감사를 고집하더니 면죄부를 줬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직 책임감이나 연구 수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이러니 제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무더기로 휴직한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해킹 조사도 거부했다. 이 선관위는 그대로 둘 수 없다.

## 역사 막말 김준혁 역사 특강, 양문석엔 환호, 김남국은 복당

민주당 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선자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부하뇌동했다 당내 기록권 세력들을 공천 혁명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작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수박(비명계)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저버린 채 이 대표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에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때도 “불참하는 의원들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 공천은 ‘비명회사 진행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공천을 이들은 ‘공천 혁명’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이번에 출마자 50명 중 31명이 당선돼 당내 최대 계파로 떠올랐다. 그 첫 모임에서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항은 성관계 지탄’ 등 막말로 지탄을 받았던 김준혁 당선자를 소개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들

다”고 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당선자에게 “멋지다” “전국구 스타”라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모임엔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와 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해 구애 경쟁을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를 무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도 차지했다. 당을 장악하고 국회 운영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 중 거액의 코인 거래로 탈당했던 김남국의원은 ‘당당히’ 복당하면서 “마녀사냥으로 탈당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 핵심 ‘처럼회’ 소속인 그는 탈당과 총선 불출마로 국회 제명을 피했다.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엔 사과문까지 냈었다. 그러더니 총선이 끝나자 억울한 피해자라고 한다.



동영상 시청

##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30일 산하 공론화위가 보고한 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올라간 방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토론·학습을 진행한 다음 투표를 통해 1안을 다수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1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1안은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이 더 늘어난다. 현재 10대인 세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내는 돈 인상

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내는 돈을 26년째 못 올려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5월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인상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 연령층별 연구수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에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방법이 없지 않다.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것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1안과 2안의 평균(각각 12.5%, 45%)으로만 절충해도 받는 돈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민주당 간사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1안과 2안을 선택한 비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두 안을 절충해 5월 중에 통과시킨다면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다.

## '尹·李 용산만남'은 무엇인가

# 간보기인가, 2차 탄핵 정변 서막인가... 5가지 원칙,尹대통령에 요망한다



▲ 이재명의 [간보기]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일방 요구문] 15분 남독으로 시작했다. 이재명의 이런 [투항하라]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고 받아 넘겼다.

언론공개를 거당한 이런 준비서면 남독 수법은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원조다. 2023년 6월8일 이재명은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관저를 찾았다. 일개 국장급 외교관이 저녁 먹고 부르지 체면 위신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있는 이재명을 두고 심하이밍은 A4용지를 꺼내 들고 무려 15분간 일방 훈계를 했다. 이재명은 그냥 듣고 있었고, 배석한 권철승 대변인은 비굴한 자세로 받아 적었다. 심하이밍에게 한 수 배웠는지, 이재명도 같은 수법을 썼다. 원고를 읽은 시간도 둘다 15분 정도다. © 연합뉴스 뉴시스

- ① [자유인의 정도(正道)] 일관되게 견지하라
- ② 일방적 유희책, 주고받기 기대 등 금물
- ③ [사이비 개혁 보수] 더 이상 믿지 마라
- ④ [탄핵 정변] 음모에 대비하라
- ⑤ 이재명 조국 등 피고소 금배지 구속수사하라

### ■ [용산 만남]은 일단 간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용산 만남]은 무엇이었나?

한반도 정치와 한국 정치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용산 만남]은 일개 이벤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별것 아니었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 만남에 지나친 비중을 인정하는데 반대했다. "윤대통령, 투항하지 말라"며.

### ■ [용산 만남] 핵심 이슈 3가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요구 중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하다.

그러나 ★ 의뢰계 문제 ★ 채상병 특검 ★ 이태원 특별법 ★ 민생 대책 같은 사안들은, 비록 유의미하다고는 해도, 오늘 핵심 이슈는 아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① 윤대통령을 [그대로 놓아줄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

② 이 싸움에서 [야권(我陣)]은 누구이고, [적군(敵陣)]은 누구인가?  
③ 29일의 윤(尹)이(李) 만남에서는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 ■ 분명한 건,尹대통령 밀어내겠다는 것

①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적의 + 국민의힘 안팎의 탄핵 세력 + 중간파 언론]이 한때가 돼,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내려 한다.

이들 반대편에선 여러 종류의 [전투적 자유 투쟁] 세력들이 외롭게 탄핵 음모에 [Lno]라고 외치고 있다.

### ■ '투항하라'에 "그러나"?

③과 관련, 29일의 [용산 만남]에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윤석열 2년 동안,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만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국내 한 유력 신문 온라인판은 이재명의 이 일방적 왜곡 발언을 그대로 자기들 톱기사의 큰 제목으로 달았다. 좌파 권력과 언론 권력의 [탄핵 동업]인가?

### ■ 다음 5가지 명심하라

이에 [전투적 자유 투쟁] 노선을 지지하는 정통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요망한다.

①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裁量)에 속한다. 그러나 [자유인의 정도(正道)]만은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② ★ 일방적 유희책 ★ NL 운동권을 단순한 [정보]로 착각하는 것 ★ 그들을 똑같은 [대한민국 동업자]로 오인(誤認)하는 것 ★ 이쪽이 양보하면, 그들도 양보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③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안팎의 [상습적 탄핵] 세력과 [사이비 개혁보수]의 보이스 피싱에 더는 덩어지지 말아야 한다.

④ 국과 혁명의 물꼬를 띄워줄 [제2의 탄핵] 정변을 선제적으로 타격·분쇄해야 한다.

[거국내각연립정권 내각제 개헌-거부권 자제]란 허울 좋은 이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⑤ 이재명 조국기타 수십 명의 피고소(被告) 금배지들부터 즉각 구속 수사하라!

【류균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4월 29일 게재 되었습니다.